

북한체제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분석*

김 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시장화를 중심테제로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 추이 및 불가역적 상황전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보이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초기자본주의 특징이 발견된다. 현재 북한체제에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상호 이질적 존재는 필요에 따라 결합(結合)과 분리(分離)가 교차하며 이중경제 체제를 구축한 채 북한경제를 견인(牽引)하고 있다. 그리고 약화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민간분야 경제주체(economy agent)들의 활약으로 인해 내수경제는 자체적인 생존능력을 보여주며 작동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주체의 대표주자인 돈주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특혜와 편익, 지대추구로 공유된 이익의 공생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이 경제활동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직적 지대추구(rent seeking)와 같이 부패 경제구조 하에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이른바 소

* 본 논문은 2018년 통일부신진연구자정책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북한내부의 경제사회적 변화역동성 분석, 생존에서 기호로)의 후반부를 재구성한 논문으로 동 연구결과 전반부를 토대로 쓰여진 1차 논문(분단체제내부 경제주체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이행과정 분석, 생존에서 기호로)과는 내용적으로 전혀 별개의 논문임을 밝힌다.

수의 내부자(insider)들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유와 특권을 향유할 수도 있다. 한편 점차 생존(生存)의 전제조건에서 이제 개인적 기호(嗜好)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소비문화의 형식과 내용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력도 인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연일 강조 하는 등 경제와 소비문화에 대한 체제내부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화의 발달이 초래한 자본축적현상은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자립형 인민'을 생성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와 더불어 강고한 계층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절대성도 차츰 상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권력의 희망과 달리 고도로 정교한 기존 주민통제시스템은 서서히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탈(脫)코드화에 의해 궁극적으로 차츰 무력화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시장화의 동반현상으로 북한체제 기층(基層)으로 부터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추세는 궁극적으로 사회변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불가역적(irreversible) 성질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 경제, 시장화, 경제주체, 불가역성

I.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정치적 구호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여전히 주장하지만, 북한체제는 이미 상당 수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초기자본주의의 내용적 특징이 발견된다. 국가와 시장이라는 상호 이질적 존재는 필요에 따라 각자 결합(結合)과 분리(分離)가 교차하며 북한특유의 이중경제체제를 구축한 채 북한경제를 견인(牽引)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악화된 거시지표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생존력을 보여주며 작동중이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수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은 이른바 민간경제주체(economy

agent)들이다.¹⁾ 그리고 이 중에서 돈주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민간분야의 경제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시장은 양적확대 및 2, 3차 산업의 등장과 분업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와 동반해 신용자본계급이 주도하는 질적 소비문화도 빠르게 확산중이다. 어느새 생존(生存)의 수준을 넘어 질적 소비, 즉 사적기호(嗜好)를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한 소비문화의 질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체제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북한당국이 내부적으로 자본주의 '부르주아문화'의 위협성을 경고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기풍을 강조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정신적 물리적 변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도 과거와 달리 인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연일 강조하는 등 경제조건과 소비문화에 대한 체제내부의 분위기 변화도 최근 감지되고 있다.

시장화의 발달이 초래한 자본축적현상은 더 이상 먹고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인민'을 생성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화의 진전과 비례해 북한 내부의 강고한 계층구조와 이데올로기의 절대성도 서서히 상대화될 것이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체제 기층(基層)으로 부터 보이지 않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사회경제적 역동성은 주민들의 가치관변화를 추동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계층 질서를 교란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내부의 경제현상과 관련, 이러한 변화추세가 존재론적으로 불가역적 성질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권에서 시장화가 시작된 이후 다시 사회주의경제시스템으로 회귀한 사례는 전쟁과 같이 외부로부터 물

1) 본 연구자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주체를 계획경제의 국가와 민간부분의 경제주체(economy agent)로 구분하고, 특히 민간경제주체들이 주도하는 경제사회적 현상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리적 개입이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곤 아직 없다.

II. 북한경제의 작동기제(mechanism) 분석

1. 북한경제현황

현재 북한경제는 극단적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계획경제와 민간의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軸)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질적 식량문제가 자체 공급 체계에 의해 나름 관리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경제성장률도 일정수준 성장기조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6년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3.6%대에 이르기도 했지만, 북핵 문제로 인해 본격적 대북제재가 시행된 2017년에 들어서며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격 전환되었다.²⁾ 2018년과 2019년의 경우엔 성장률 감소가 보다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³⁾ 관련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반

2)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국적의 선박 검색 의무화, 북한산 광물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최고수준의 제재(안보리결의 2270호)를 채택한다.

3) 이유진, 「북한포커스: 최근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동향」 『KDB리포트』 (2019), <https://rd.kdb.co.kr/FLPBFP03N01.act?_mnuId=FYERER0031>. 대북제재 국면의 지속으로 북한의 수출 여건 역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 무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수준 지속이 전망되며, 대중수출 품목이 비(非) 제재 품목 중심으로 전환중이긴 하지만, 제재품목인 철광석 등 주로 광물에 의존했던 기존 수출 구조를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입품목 또한 다변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외화 부족요인으로 인해 전체 수입량의 회복세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2018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6.3% 감소한 2억4천만 달러, 수입액은 31.2% 감소한 26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무역적자는 23억6천만 달러로 전년(2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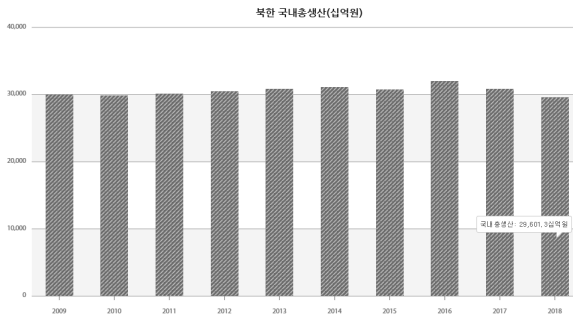
적으로 지난 몇년간 북한체제는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자료(The United Nations, 2018)에 따르면 같은 기간 북한의 1인당 GDP는 548달러 수준에서 600달러 후반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현재의 제재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의 안정 기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특히 외환 부족사태는 외부투자가 거의 봉쇄된 북한으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스스로 주장하듯 국제사회의 상시적 제재구조에서 나름의 생명력으로 버텨온 북한경제가 단기간에 고난의 행군시기와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항방에 따라 경제위기 가능성이 전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중국이라는 독립변수가 존재하고, 또 유엔 제재 자체가 생필품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 폭등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종경제 체제의 한 축인 민간부분의 시장이 생필품과 식량 등 상당량의 공급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은 만성적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과거 90년대 후반과는 내용적으로 상당히 다르고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북한경제 현황을 개괄할 목적으로 국내외 관련 기관들로부터 입수한 1차 자료를 인용하거나 필자 나름대로 편집한 것들이다. 북

1천만 달러)보다 17.5%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북한의 2018년도 수출 규모는 3억 달러로 2017년(18억5천만 달러) 대비 83.8% 감소했고, 2018년도 북한의 수입규모도 25억9천만 달러로 전년(39억3천만 달러)대비 34.1% 축소됐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2018년 5천200만 달러로 2017년도 (6천300만 달러) 와 비교해 17.5% 감소했다. 그런데 특이점으로 외부경제제재로 인해 급감했던 대중(對中) 무역 규모가 20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대비 88.2%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2019년 1월에서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5.6% 정도 소폭 증가를 보여준다.

한의 국내총생산, 산업구조변화, 경제활동별 명목 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통계, 과거 10년 동안의 국가예산 등을 나열한 자료로서 해석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⁴⁾

〈그림 2-1〉 2019 북한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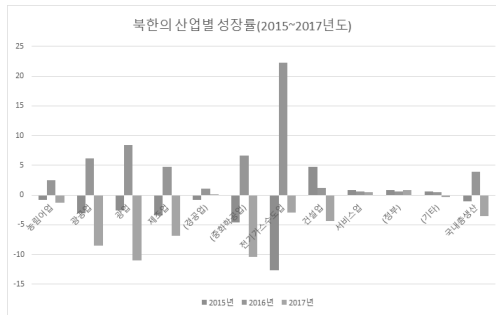


경제활동별	2018	2017	2016	2015	2014
국내총생산	29,601.3	30,882.3	31,986.6	30,804.9	31,160.9
농림어업	6,921.0	7,049.4	7,144.1	6,967.9	7,024.9
광업	9,173.4	10,462.0	11,428.7	10,765.6	11,107.0
제조업	3,506.7	4,265.5	4,790.4	4,410.0	4,537.0
서비스업	5,631.7	6,196.6	6,657.9	6,351.1	6,973.3
공공업	2,063.1	2,119.2	2,116.5	2,093.6	2,111.5
민간업	3,568.6	4,077.4	4,541.4	4,257.4	4,861.8
전기·가스·수도업	1,223.2	1,157.3	1,192.5	975.4	1,117.8
건설업	2,393.0	2,494.0	2,608.7	2,576.5	2,457.6
서비스업	3,693.4	3,608.0	3,561.6	3,505.2	3,432.0
정부	7,012.1	6,959.4	6,904.4	6,860.6	6,803.6
기타	2,681.5	2,650.3	2,657.1	2,644.4	2,629.2
순생산물세

출처: 통계청-북한통계포털; <<http://kosis.kr/bukhan>> (검색일: 2019. 8. 9)

4) 특히 북한경제관련 1차 자료와 관련, 이른바 통계수치가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세부품목과 거래량 및 실제소비경향(trend)과 같은 구체요소가 누락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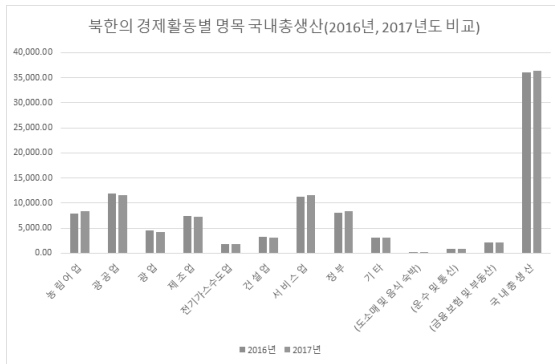
〈그림 2-2〉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왼쪽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2018. 8. 20) 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림 2-3〉 북한의 경제활동별 명목 국내총생산(한국 십억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2018. 8. 20) 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표 2-1〉 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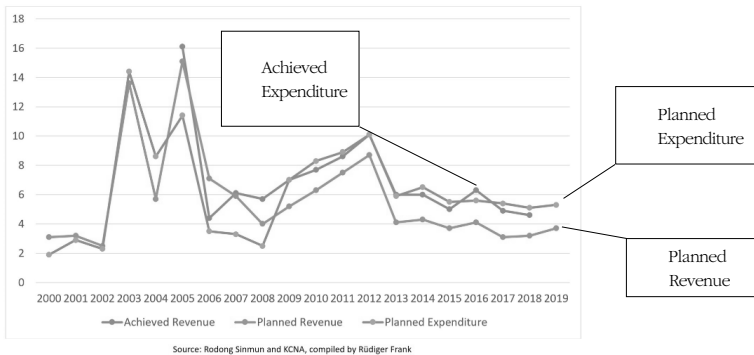
	실질		증감률	명목		구성비 (2017)
	2016	2017		2016	2017	
농림어업	7,144.1	7,049.4	-1.3	7,832.6	8,304.5	22.8
광공업	11,428.7	10,462.0	-8.5	11,980.1	11,573.2	31.8

	실질		증감률	명목		구성비 (2017)
	2016	2017		2016	2017	
광업	4,790.4	4,265.5	-11.0	4,547.4	4,271.4	11.7
제조업	6,657.9	6,196.6	-6.9	7,432.7	7,301.8	20.1
전기가스 수도업	1,192.5	1,157.3	-2.9	1,874.5	1,836.5	5.0
건설업	2,608.7	2,494.0	-4.4	3,194.7	3,146.8	8.6
서비스업	9,561.6	9,608.8	0.5	11,221.4	11,520.7	31.7
정부	6,904.4	6,958.4	0.8	8,098.4	8,446.8	23.2
기타	2,657.1	2,650.3	-0.3	3,122.9	3,074.0	8.4
도소매 및 음식 숙박	127.5	125.8	-1.3	134.7	136.0	0.4
운수 및 통신	762.8	730.9	-4.2	915.4	838.2	2.3
금융 보험 및 부동산	1,767.9	1,795.3	1.5	2,072.8	2,099.8	5.8
국내총생산	31,996.6	30,882.3	-3.5	36,103.3	36,381.8	10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2018. 8. 20) 연구원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그림 2-4〉 북한의 국가예산의 연간증가율(%) (2000-2019)

Annual Growth Rates (in%) of North Korean State Budget (2000-2019)



출처: “The North Korean Parliamentary Session and Budget Report 2019: Signs of Economic Stagnation and an Open Claim to Leadership on the Korean Peninsula By Ruediger Frank,” 『38 NORTH』, 2019년 4월 13일; <<https://www.38north.org/2019/04/frank041319>> (검색일: 2019. 8. 5)

관련자료의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북한경제는 체제붕괴와 같은 극단적 위기국면은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북핵문제의 여파로 등으로 경제성장이 본격적 성장 모멘텀(momentum)에는 돌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노출하고 있다. 제시된 통계가 실증하듯 대북제재로 인해 거시지표는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이중(二重)경제체제

대북제재체제하에서 북한경제의 거시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식 통계만을 가지고 북한경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 공식통계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시장의 숨겨진 잠재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며 실물경제를 유지시키는 ‘힘’은 다름 아닌 민간경제주체들이다. 거의 일상화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재화를 확보하고 계획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시장의 역할은 국가의 계획경제와 더불어 북한의 또 다른 경제역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의 범주는 장마당의 매대 상인으로부터 달리기장사, 차판장사, 되거리 장사꾼(도매상인) 나아가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巨大) 돈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중경제(double economy)체제에서 이들 경제주체들의 역동성이 북한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민간분야의 경제주체들은 내수경제에서 소비를 주도하고 유통성을 공급한다. 결국 공식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민간시장의 역동성은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숨겨진 잠재력(hidden potential)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경제의 비공식 생산성을 추정한다면, 북한의 전체 국부(國富)

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 시장과 관련된 북한국가정책의 기원은 1950년 1월 내각 결정 1호를 통해 전통적 재래시장을 개량한 농촌시장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주의 초기 사적 경제활동을 일시에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당국은 개인의 상업 활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도시근로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시장을 활용했다. 북한 당국은 농산물과 부산물을 거둬들이는 대가로 농민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공산품을 싼값으로 제공하였다. 당시 도시 근교에 자리한 농촌 시장은 도시와 농촌 주민간의 중요한 소비 통로였다. 그런데 농촌시장의 거래품목 중 쌀, 옥수수과 같은 식량의 거래는 금지된다.⁵⁾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국가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자원 만큼은 국가가 반드시 장악한다는 사회주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후일 북한 내부에 본격적 시장화의 원인을 초래한 것은 역설적으로 90년대 대기근 이후 국가배급제의 붕괴 사건이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부르는 바로 그 시기다. 결국 국가의 식량공급망의 붕괴가 곧 북한 내 본격적 시장화의 시발점이다.

북한경제는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체제존립의 근간이다. 북한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제20조)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가 국가소유(제21조)와 사회협동단체 소유(제22조)에 한정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북한 내 사유재산권, 즉 개인의 소유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소비재에 한정되어 왔었다. 이후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소유범위가 부분적으로 확대되었다.⁶⁾ 시장화 이후 현재 상당수 북한

5) 정은미, 「북한의 이해 북한의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다」 『내일을 여는 역사』 제74호 (2019), 215쪽.

6) 통일부 통일교육원 엮음, 『2017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141쪽.

의 국영기업과 상점들은 형식적으로는 ‘국영(國營)체제를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일반 사(社)기업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별히 민간 경제주체의 선도세력인 돈주들은 이러한 국영기업과 상점에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한 후 관행적 소유권을 공공연히 행사하곤 한다.

과거 김정일 정권은 2002년 부분적으로 시장을 제도화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시행했다.⁷⁾ 이 조치는 경제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했던 ‘체제내적 개혁’ 조치였다.⁸⁾ 북한 당국의 의도와 별개로 ‘7.1조치’는 획기적 수준의 개혁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농산물 위주의 기존 농민시장에다 공산품과 수입상품까지 거래를 허용하고 암시장을 통합하여 종합시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7.1조치’는 상당 수준 북한경제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촉진시켰다.⁹⁾

시장화현상은 분명히 아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은 역설적으로 권력기관의 관료들이 비합법적 비공식적 영역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가산관료제(patrimonial bureaucracy)적 속성상 위로 올라갈수록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은 쉽지 않으며,

7) 위의 책, 166쪽. 7.1 조치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① 국영기업소, 협동농장 등 각 경제 단위의 경제 활동에서 경영 분권의 부분 허용 ② ‘변수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영자로 변경, ③ 시장가격 수준으로 시장 국정가격의 현실화, ④ 협동농장 분조 축소(20명 내외 단위→7-8명 단위로 축소)와 개인경작지 규모 확대(30평→400평), ⑤ 공산품·식량 거래를 공식 허용하는 종합시장 도입(2003년), 기업소 간 원자재 거래를 허용하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도입(2002년), 수입 물자들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수입물자교류시장 도입(2004년), ⑥ 물질적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치였다.

8) 위의 책, 166쪽.

9)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184~189쪽.

아래에서 위까지 모든 사회가 관행화된 부패의 사슬로 묶여있다.¹⁰⁾ 이 같이 왜곡된 경제시스템 하에서 시장에 참여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소수의 게임메이커(game maker), 즉 시장의 내부자(insider)들은 기회가 봉쇄된 외부인(outsider)들과 달리 역으로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제적 거래의 자유와 특권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과 거주자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식적으로 시장을 불허하는 북한특유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결국 ‘계렬라’와 같이 산발적으로 이합집산(離合集散)하고, 당국의 시장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정도의 남다른 경제 감각과 능력을 축적해온 민간경제주체들에겐 자유거래를 제약하는 기존 통제구조가 오히려 시장독점과 이익확대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하다. 동시에 내부권력의 의도와 달리 고도로 기획된 주민통제체계는 서서히 시스템 내부의 탈(脫) 코드화에 의해 궁극적으로 무력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특별히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특혜와 편익, 지대추구로 공유된 이익의 공생관계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북한 특유의 적응력(adaptability)으로 규정하고자 한다.¹¹⁾ 한편 시장화로 인해 미래에 초래될 수도 있는 북한의 체제변이 가능성과 관련, 아직까지 기존 정치시스템의 가시적 변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경제 잠식은 언제든지 정치권력에게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은 상존하며, 따라서 북한당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상황논리에 따라 시장을 허용하거나 억제하는 비일관적 정책을 반복해 온 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처음부터 시장과 유사한 기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시장이라는 민간경제 메커니즘이 공식적으

10) 최용환·김소연,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19쪽.

11) 김신, 「시장화와 인권(권리)의식의 재발견」,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21~245쪽.

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배급제가 충족하기 못했던 재화의 수요는 항상 존재했기에 사회주의 체제특성상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는 ‘암시장(black market)’ 등 나름 자생적 공급체계가 작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우선순위변화 – 경제가 정치에 선행(先行)한다

‘자력경제’와 ‘인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강조하는 통치자의 통치전략에 따라 북한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책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46년 1월 1일부터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신년사는 남한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나 미국의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National Message)’와 유사한 형식으로 폐쇄적국가인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통치이념과 정책노선을 스스로 밝히는 공식메시지(official message)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최고지도자의 의중(意中)이 정책선택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북한정권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교시(敎示)를 담고 있기에 신년사는 북한당국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식자료로 간주되곤 한다.¹²⁾ 이에 따라 외부에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의 세부주제로 메시지 자체의 담론분석 및 과거신년사와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다층위적 방식으로 분석한 후 북한의 통치전략예측에 활용해왔다. 신년사의 형식과 관련, 과거 김정일 집권기는 육성이 배제된 공동사설형식으로 신년사가 발표되었지만,¹³⁾ 김정은 체제 등장 후 2012년 공동

12)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2호 (2015), 28쪽.

13) 김정일 집권기(1995-2011)에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연설방식을 기피한 김정일의 성향이 반영돼 북한의 3대 신문(『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형식을 통해 신년사가 발표 됐다.

사설을 제외하곤 계속 연설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신년사는 특이하게도 사설형식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촉발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2019년까지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이유는 자신이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김정일 집권기의 비대면적 형식을 대면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활력 있고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통치철학을 전달하고자 하는 복합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 집권 이전 신년사에서도 경제 분야와 관련, 자력경제와 경제부분의 혁신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¹⁴⁾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일 집권기와 비교해 경제자립과 실질적 인민생활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대한 통치자의 의지가 더욱 명확히 강조되고 있다. 2019년 신년사 역시 경제자립과 민생경제의 중요성이 유난히 강조되었다.¹⁵⁾ 신년사에서 ‘경

14) 김정일 집권기 2001년 신년공동사설은 “인민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01년 1월 4일자 『로동신문』은 김정일의 교시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과거의 시기에 만들어진 기초위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목을 계속해서 일신해가지 않으면 안 되며, 대담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기술개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15) 2019년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분야에 집중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관습적 형식인 대외 메시지, 당과 군, 정치, 경제, 사회분야 관련 내용 중 단연코 경제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아래 경제와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력, 금속, 석탄, 화학, 농·축·수산업 등을 열거하며 중요성을 언급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깊은 관심이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경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제라는 단어가 무려 38회 언급되고 있으며, 언급 횟수를 과거와 비교할 때(2018년 21회, 2017년 18회) 김정은이 얼마만큼이나 자립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¹⁶⁾ 북한매체 역시 북한주민의 먹고사는 문제의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김정은의 현지지도 영상을 빈번하게 노출시키고 있다.¹⁷⁾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현재 군사와 경제, 두 가지 분야에 주로 집중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 분야 현지지도 대상으로는 주로 피복가공공장, 식품가공공장, 식료가공공장, 양말공장, 일용품공장, 화장품공장, 신발공장, 위생용품공장 등의 경공업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공업위주의 현지지도는 김정은이 인민생활수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통치전략으로 분석된다.¹⁸⁾ 이와 함께 이 같은 김정은의 통치활동은 당면한 경제현안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결국 현 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권력내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북한뿐 아니라 다수의 폐쇄적 권력이 경제 분야에 체제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경제정책에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속성 때문이다.¹⁹⁾

연이은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를 목격하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북한이 내놓은 경제정책노선은 ‘우리식자력경제’였다.²⁰⁾ 당시 대부분 동

16) 전재성, 「북한 신년사와 2019년 북핵 문제 전망」, 『EAI 이슈브리핑』 (2019), <http://www.eai.or.kr/main/publication_01>.

17)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총 횟수가 643회에 이른다. 배영애, 「김정은의 현지지도의 특성연구」 『통일전략』 제15권 4호 (2015), 139쪽.

18) 위의 논문, 147쪽.

19) Christopher S. Clapham, *Third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0), p. 91.

20) 정혁·최창용·최지영,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분석」

구 사회주의권이 선택한 급진적 경제개혁 조치와 달리 상황논리에 대응해 마지못해 급조된 북한의 대응은 당연히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오히려 체제 분위기를 다잡으며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체제보장에 몰두하며 오로지 핵개발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힘든 수십만 아사자(餓死者)를 낳은 민족적 비극,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된다.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통치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가배급제가 붕괴되었고, 그 결과 ‘배고픈’ 인민들은 저마다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장마당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본격적 시장화의 근본 배경이다. 그런데 이 시기 나타나기 시작한 ‘장마당’은 소규모 잉여농산물의 거래를 위해 1950년대부터 내부적으로 허용된 ‘농민시장’과는 기본성격 자체가 달랐다.

식량부족은 인간이 직면한 한계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이유(rason d’etre)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북한의 세습권력은 끝내 존속할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군을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합법적 폭력집단인 군을 체제옹위의 첨병으로 활용했고, 평양 지역과 핵심지지 세력에 대한 차등적 배급제 유지를 통해 체제 보위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배급제로부터 소외된 대다수 인민들은 생존을 위해 앞 다퉈 장마당에 참여하게 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장마당은 당시 북한주민들에게 남겨진 생존의 마지막 보루(堡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비일관적 시장정책기조 하에서도 초기 장마당이 점차 확대되며 종합시장규모로 커졌고, 시장은 결국 국가배급제로부터 배제된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고착되었다.²¹⁾ 국가배

『BOK 경제연구』 제13호 (2018), 11쪽.

21) 채수란,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본 평양시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행태: 종합시장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 77권 (2019), 317~318쪽.

급제 붕괴 이후 별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던 권력의 용인아래 시작된 시장화는 어느새 계획경제와 시장이라는 이중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하게 된다.

4. 경제주체(economy agent)의 활동과 초기 사유화 단계진입

1990년대 후반 위기상황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장마당’이 점차 시장으로서 형식과 내용을 갖춰가면서 경제주체들의 ‘부의축적’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자본을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이 가동이 중단된 국영공장, 기업소 등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사유화도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체제성격상 부동산의 사적소유가 허용되지 않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뇌물을 주고 관할기관에 국가주택 이용허가증(입사증)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사적거래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은 통상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²⁾

구조적 한계와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경제주체가 북한 내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가 다름 아닌 ‘돈주’들이다. 이들은 외부의 경제제재 상황에서 특히 생필품의 수요와 공급을 상당부분 책임지고 내수경제를 지탱하며 동시에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북한의 사전에서 돈주는 돈의 주인을 의미한다.²³⁾ 일반 주민과 비교해 월등한 구매력을 가진 이들 돈주들은 출신성분에 의한 전통적 특권계급과 달리 장마당에서 생존방식을 스스로 터득하고 자본을 축적한, 이른

2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 142쪽.

23) 『조선말 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연구소, 2006), 1126쪽.

바 ‘장마당세대’로서, 북한신흥자본계층의 모델(model)과 같다. 돈주들은 소비시장에서 이른바 ‘돈쓰는 법’을 전파하고, 동시에 새로운 경제영역을 북한사회에 구축하고 있다. 돈주는 시장을 활용해 화폐자본을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이며, 따라서 돈주의 등장은 북한경제의 자금용 발생과 분리해 설명할 수 없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외화상점이 생겨나며 거액의 북한원화를 환전해주는 ‘돈 장사꾼’이 등장한다. 당시 ‘돈장사꾼’은 외화상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이를 사적이익의 기회로 활용한 경제적 감각을 가진 ‘수완꾼’들이었다. 북한에서 돈주의 또 다른 명칭은 ‘돈데꼬’다. 돈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번다는 의미에서 돈데꼬라 부른다. 북한시장에서 돈주는 기업과 대규모 ‘물주(物主)’를 움직이는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 수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국내적으로는 소비재의 생산, 도매, 소매를 작동시켜 이익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이들의 자체역량은 시장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²⁴⁾ 과거 동구와 구소련의 사례를 보면 시장화과정에서 국영기업소의 책임자였던 이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자금을 동원, 수의계약(隨意契約), 입찰, 불하(拂下)의 방식으로 자신이 관리했던 기업소나 공장의 소유주로 전환되는 경우가 실제 다수 존재했다.²⁵⁾ 북한의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의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향후 시장화수준이 체제이데올로기 관성을 극복할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생산력 증대 등을 이유로 북한 역시 동유럽 및 소련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내부이해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국영기업이나

24) 김영희, 「돈주 그들이 돈을 버는 법」 『통일한국』 제391호 (2016), 30~31쪽.

25) Janos Kornai,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and does not mean,”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vol. 14, no. 1 (Winter 2000), pp. 34-40.

공장의 경영을 위탁하거나 양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북한국영기업소의 책임비서가 내부적으로 수평 이동해 '사장'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향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산업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자본의 투자행태가 양성화되는 과정이자, 초기자본주의화의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다시 말해 '수완'이 발휘되는 구체적 사례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혁명역사를 가르치는 노천박물관 왕재산 혁명 전적지, 백두산 혁명 전적지 건설에 필요한 목재, 시멘트, 건설자재를 실은 열차들은 북한내부에서 '5호선'으로 불리며 언제나 다른 열차들보다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주들이 운영하는 석탄, 광석, 소금을 실은 열차방통들이 5호선 열차들보다 먼저 통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열차 이동을 총지휘하는 사령실에서 각 역들에 뇌물을 받은 화물열차를 먼저 통과시키라는 지령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왕재산 전적지 건설자재는 제때 수송하지 못해도, 개인 소금 장사꾼의 열차는 통과하는, 과거 북한체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국유재산의 사유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전역에 철도기관차 대수가 300대 정도인데, 그중 270대 정도의 운송을 개인이 좌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상급기관에 보고됐지만, 상부에서는 해당 보고를 사실상 무시하고, 상황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사적 투자행위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²⁶⁾ 실물경제에서 민간의 역할 증가는 새로운 상황을 조장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내부의 경제담론도 이 같은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민간에 의해 공식경제가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전개를 공

26) 강은주, 「북한 돈주들의 공공사업 투자 및 운영 실태」 『북한』 제547호 (2017), 93쪽.

식적으로 합리화하는 내부담론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의한 근로자들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결합은 기업체들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의 모든 결과를 국가적 및 사회적 리익과 밀접히 결합된 개별적 근로자들의 리익에 맞게 리용되게 하는 새로운 기업활동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업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²⁷⁾

Ⅲ. 민간경제주체, 돈주의 약진과 새로운 계층의 등장 가능성

1. 북한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주체, 돈주

북한사회에서 사실상 사유화를 이끄는 세력은 다름 아닌 ‘돈주’다. 돈주는 소비문화를 선도하고 동시에 전파한다.²⁸⁾ 평양에서 돈주들은 최상

27) 김영일, 「생산과 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 『경제연구』 제4호 (2018), 21쪽.

28) 곽인욱·임을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권(2016), 263~290쪽. 돈주들은 서로 연계를 가지면서 계서제로 되어있다. 소 돈주는 평양에서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개인식당, 개인상점,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돈주들이다. 중돈주는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돈주로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각 지방에 외화벌이회사나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광산, 수산물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대금의 일부를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서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룡산무역회사는 사회 안전부 회사로 자동차를 독점으로 하고 있다. 생활필수품 각 품목별로 의류, 신발, 식용류, 쌀, 속옷, 화장품,

층에 해당된다. 그들은 주로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 대방과 관계를 맺고 있다. 워크권을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나 다른 무역회사의 워크권을 활용하는 회사의 사장, 과장, 지도원들이 중국의 단둥(丹東)에서 그들의 중국 대방을 만나 무역을 한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주로 북한에서는 물적 자원(광물, 수산물), 인적자원(IT, 재봉노동자, 건설노동자)이 공급되고 중국에서는 식량 및 생활필수품, 건축자재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²⁹⁾ 사회주의 체제의 법과 제도가 엄연히 존속하고 있지만,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은 시장경제로 살아가는 이중경제시스템, 다시 말해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혼재되어 있다. 실제 현실에서 계획경제시스템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었고, 역으로 시장경제시스템은 차츰 강화되며 체제 내부에 사유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분명 국가소유인 특권기관 산하 무역회사들은 독점적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때에 따라선 심지어 약탈적 행태를 보이기에까지 한다.³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투자행위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돈주들은 자금을 투자해 임대받은 국가소유건물을 자본주의 스타일로 구조를 변경한 후 내부에 새 가구를 들여놓고, 당구장, 사진관, 컴퓨터오락장, 식당, 상점, 편의시설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온 후 2~3년간 평양시, 평성시, 남포시, 청진시를 비

전자제품, 의약품, 조미료, 당과류(식품), 과일, 밀가루, 설탕, 비닐 방막 등이 있다. 10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대돈주는 대략적으로 100명이 있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이후 밀바닥부터 장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른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평양시 안전부장 아내였던 그녀는 더 높은 권력자를 결탁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했으며, 대돈주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로 간부이면서 시장경제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29) 위의 논문, 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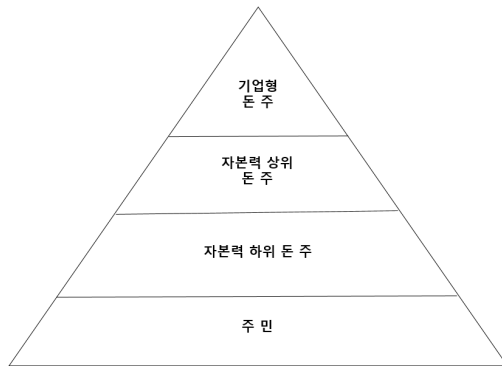
30) 위의 논문, 284쪽.

못한 북한의 큰 도시들에서는 상점, 기관의 건물들에 대한 인테리어 붐이 전면적으로 일어났다. 근대적 공간과 현대적 인테리어가 어우러진 공간은 개인과 공공기관의 공동운영으로 보이지만, 결코 이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편의관리소 사무실을 당구장으로 꾸며놓고 편의관리소 소속 직원들이 당구장 관리를 담당하곤 한다. 당구장 운영에 필요한 당과류, 주류, 식품 등은 개인이 가져다 판매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 국영상점들도 개인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 이전에도 북한의 상점에는 전시성 상품 외에는 판매 상품이 항상 부족했지만, 7.1조치 이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산 상품을 위주로 동남아산, 드물게 일본산 상품들이 상점의 매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영상점들이 상품공급역할에서 상품의 위탁수매 방식으로 발전된 후 운영되고 있다. 개인들이 판매용 상품을 상점에 맡겨두고 판매 후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위탁한 가격의 5~1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는 수백종류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³¹⁾ 이미 북한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분야든 돈주가 개입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돈주들 가운데 정보력과 자산규모가 월등한 극소수 기업형자산가들이 지대를 추구하는 국가권력과 상호 더욱 확대된 독점적 공생관계를 설정한 후 앞으로 체제내부에 극소수 거대자본가, 즉 하나의 특권경제계급을 형성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이른바 실물경제의 경험을 토대로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인과 유사한 정체성을 가지며 이익추구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31) 강은주, 「북한 돈주들의 공공사업 투자 및 운영 실태」 『북한』 제7월호 (2017), 93쪽.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의 북한식 신흥경제인들이다. 돈주와 같은 신흥경제주체들은 북한당국이 장마당의 허용과 억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식 시장경제를 몸으로 경험하며 나름의 생존방식과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터득한 실물 경제인들이다. 덧붙여 북한경제의 특수성, 즉 북한경제시스템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경제메커니즘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유지되는 숨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민간 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를 지탱하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그림 3-1〉 북한시장의 서열구조



2. 돈주와 정치적 역학관계

북한체제 내부에 본격적으로 소위 ‘경제적 수단’을 통해 더 이상 당과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민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기존

정치질서에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등장을 곧 ‘극적체제변환’의 가능태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물론 상당수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자본주의 경제인들과 매우 유사한 듯 보이는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이들의 관심과 목적은 순전히 경제적 이익, 달리 말해 시장성, 수익, 이익의 크기, 기회비용 등 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경도(傾倒)되어 있을 따름이지, 이들이 시장경제시스템을 채용하고 또 이를 긍정한다고 해서 곧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마저 자본주의화 됐다고 볼 근거는 아직 희박하다. 더불어 시장을 선도하는 돈주들 가운데 표면적으로도 체제에 우호적 태도를 가진 이들이 시장을 선도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다. 대개 체제에 대한 충성도는 자연스럽게 독점적 특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제를 부정하는 ‘사업가’가 북한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체제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돈주가 차지하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관련, 우리 학계 일부에서 북한체제를 여전히 수직적 계급구조로만 인식함으로써 돈주가 북한체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계급적 지위를 정치권력보다 열등한 존재로 고정한 후 언제든 정치권력에 의해 돈주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화가 상당 수준 고착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후 이원화가 거의 불가능한 관계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에서 돈주와 권력층과의 결합은 상호이익을 토대로 구축된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 달리 말하면 시장화의 진전으로 만약 북한체제가 향후 급변사태에 빠지게 된다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에서 경제주체들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통일을 실제 가정한다면, 현재 북한의 돈주들이 가진 경제력은 남한의

자본가들과 비교해 아직은 규모면에서 경쟁상대로 보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북한의 돈주들은 기존정치체제가 붕괴되는 것보다 오히려 현 분단 상태의 유지를 통한 독점적 지위의 지속을 희망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북한의 권력과 돈주의 관계는 이중적 공생관계이자 동시에 모순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³²⁾

3. 부(富)의 집중 그리고 계층분화 가능성

북한에서도 애덤스미스(Adam Smith)가 언급한 소위 ‘경제적 인간’의 본격적 등장 이후 경쟁자들과 비교해 정보와 자본을 독점하고 매점매석을 통해 특정 상품의 유통을 장악하는 등 자신만의 사업적 수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부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부의 집중현상은 머지않아 체제 내부에 극소수 거대자본가의 등장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다. 나아가 소수에게 한정된 경제력집중현상은 이데올로기보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는 새로운 담론문화를 체제 내부에 확산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자본의 소수집중 현상이 단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conomics)와 같은 동반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³³⁾ 한편 소비능력의 차이가 야기하는 소비불평등은 결국 경제 불평등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이른바 ‘경제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되는 이같은 소비불평등은 경제력을 가진 소수에게 재화가 집중됨으로써 생활양식의 차이를 낳게

32) 김근식·조재욱,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정치변동에의 함의」, 185~186쪽.

33) Aghion, Philippe; Bolton, Patrick, “A Theory of Trickle-Down Growth and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4, no. 2 (1997), p. 151.

되고, 결국 특권층과 비특권층으로 이원화된 후 긴장과 갈등이 내재된 불평등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히 이러한 소비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본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서는 금기시되는 계급형태이다. 물론 과거에도 다수의 전체주의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한 소수특권층의 내밀(內密)한 소비행태는 존재했지만, 일반주민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구체적인 소비행위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정 공동체 내부 구성원 사이의 계급분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배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사한 교육수준, 직업, 문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공간을 공유하는 구성원 사이의 경제력 격차는 사회내부에 생활양식의 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소외현상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흔히 연대감(solidarity)과 같은 경제사회적 감정은 동일집단 소속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연대감 내지 동질감은 서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유사하다는 자기인식을 토대로 작동하는 기제이다. 나아가 공유된 연대의식은 동시에 타(他)그룹에 대한 의도적 배제나 거부로 재현되곤 한다.³⁴⁾ 그런데 만약 동일집단 내 구성원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될 경우, 연대감이 언제든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으로까지 전환될 수 있다.

과도한 경제력의 차이는 내부구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부의집중현상'은 차츰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벌어져 결국 수직적 계층분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시장화는 특정계층에게 부의 축적기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새롭게 부상한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지향적문화가 체제 내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체제변화 가능성의 요인들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에서 무엇보다 '돈주'로 상징화되는 경제주체들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³⁴⁾ Lewis Coser,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London: Routledge, 1998), p. 35.

시장화 초기 자영업 수준의 개인기업이 대종을 이루었지만, 시장화가 진점됨에 따라 자본을 일정수준 축적한 개인기업들 중에서 사업규모도 확장되고 일꾼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실제 나타나고 있다.³⁵⁾ 북한 내부에서 실제 이른바 생계형 기업가로부터 출발해 사업형 기업가로 성장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³⁶⁾ 단적으로 이러한 발전 단계는 초기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시장화와 불가역적 체제변화 가능성

생존이 의문시 되던 실존적 상황을 벗어나 재화의 잉여현상은 언젠가 새로운 계급질서를 북한 내부에 착종(錯綜)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자기 보존 욕구를 지닌 민간경제주체의 약진(躍進)은 통치세력의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 통제체제에 미세한 균열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체제 내부의 이데올로기 관성 역시 과거와 비교해 상당 수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를 이데올로기보다 우선시하는 새로운 계층 질서가 등장하며 기존 계층구조의 분열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력 차이가 유발하는 의식변화나 사회이동현상, 그리고 경제력에 따른 소비행태의 다원화와 같은 북한 사회의 유·무형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5)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126쪽.

36) 위의 논문, 126쪽.

북한내부의 경제주체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팔고 사며, 먹고사는 문제를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 주체로 자립중이다. 이 같은 정체성 전환은 또한 체제 내부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경제적 풍요가 주는 편리함의 효용은 북한 체제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불가역적이라는 내재적 성질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체제의 형식은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체제를 구성하는 주체인 사람들과 그들의 담론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이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기의 북한체제로 북한체제가 회귀(回歸)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희박하다.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북한에서 통치자 1인의 수직적 결정에 의해 체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사회주의의 고유 특성상 국가권력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욕망은 상당기간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가 초래한 북한주민들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력이 주는 편리함은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시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불어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곧 정치적 자유의 신장, 나아가 향후 북한체제정체성 변화의 결정적 원인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현재로선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북한의 이중경제체제는 시장과 국가가 대결적 관계라기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중적 공생관계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와 시장의 경계는 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결국 시장화 현상과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발견되지만, 동시에 민간경제주체들이 현재의 정치체제를 전복할 내재적 힘도, 또 그 같은 의도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논의를 토대로 공생과 모순의 이중관계(the dual relationship of cooperation and contradiction)

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정치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설수립을 위한 후속 연구가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 접수: 2019년 10월 31일 / 심사: 2019년 11월 30일 / 게재확장: 2019년 12월 2일

【참고문헌】

- Clapham, Christopher S, *Third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90.
- Coser, Lewis,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London: Routledge, 1998.
- 강은주, 「북한 돈주들의 공공사업 투자 및 운영 실태」 『북한』 통권 547호, 2017, 87~94쪽.
- 곽인옥·임을출, 「평양 시장경제 실태와 특징에 대한 연구」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3권, 2016.
- 김근식·조재욱,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정치변동에의 함의」 『한국과국제정치』 제33권 제3호, 2017, 167~194쪽.
- 김 신, 「시장화와 인권(권리)의식의 재발견」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21~245쪽.
- 김영일, 「생산과 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조건」 『경제연구』 제4호, 2018, 19~21쪽.
- 김영희, 「돈주 그들이 돈을 버는 법」 『통일한국』 통권391호, 2016, 30~31쪽.
-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2호, 2015, 27~61쪽.
- 배영애, 「김정은의 현지도의 특성연구」 『통일전략』 제15권 4호, 2015, 129~166쪽.
-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114~159쪽.
- 정은미, 「북한의 이해 북한의 시장 변화의 중심에 서다」 『내일을 여는 역사』 제74호, 2019, 214~225쪽.
- 정혁·최창용·최지영,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변화분석」 『BOK경제연구』 제2018-13호, 2018, 1~51쪽.
- 채수란,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를 통해 본 평양시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행태: 종합시장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283~324쪽.
- 최용환·김소연,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20권 3호, 2017, 7~52쪽.

- Aghion, Philippe; Bolton, Patrick, "A Theory of Trickle-Down Growth and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4, no. 2 (1997), pp. 151-172.
- Kornai, Janos,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and does not mean?" *Journal of Economics Perspectives*, vol. 14, no. 1 (winter 2000), pp. 27-42.

『조선말 대사전 1권』 평양: 사회과학연구소, 2006.

전재성, 「북한 신년사와 2019년 북핵 문제 전망」 『EAI 이슈브리핑』, 2019, 1~4쪽.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Irreversible Regime Change

Kim, Sh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zing the marketization of the North Korean, which, in my opinion, will possibly lead to irreversible social and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ultimately.

Although the economy system of North Korea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m, it is found that the early capitalism has undergone considerably in North Korea. The economy of North Korea is run by the state and the market pulling and pushing each other, building its own uniqueness- the dual economy system. Despite the worse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he planned economy, the real economy of North Korea shows its dynamics and the domestic economy operates in its own circular structure. In fact, the forces that lead its domestic economy are private economic agents.

In this process, the role of economy agents(economic agents) continues to grow consistently. Not a few economy agents who may intervene and determine supply and demand process under a corrupted economic structure, such as vertical rent seeking, enjoy a different level of freedom and privileges.

The taste of consumption culture has been changed from survival to

preference, which is expected to eventually influence the consciousness of people of North Korea. recently, the political power of North Korea also does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conditions. Furthermore,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private property caused by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is creating "an independent being" who does not depend on the state to survive. Because of the marketization, the ideological hierarchy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gradually relativized gradually.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North Korea regime, it is not 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its inner control system and ideology will eventually be incapacitated by the de-coding movements within the system.

In conclusion, small changes are being detected from the bottom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t is more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hanges can be extended to social change and bears an irreversible nature simultaneously.

Keywords: North Korea, economy, Marketization, economy agents, irreversibility

김 신(Kim, Shin)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사는 북한체제의 지속력(내구력) 원인분석, 시장화가 야기중인 정치, 경제, 사회현상 분석, 북한인권문제 등이며 관련 주제를 연구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이데올로기 갈등극복과 평화공존 담론 모색」(2017), 「북한체제내부 경제주체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이행과정 분석」(2019) 등이 있다.

